

## 인도 통계청, 2012년 경제성장률 5%로 전망

작성자 : 김미수 (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)

작성일 : 2013년 3월 18일

### ■ 인도 통계청(CSO: Central Statistical Office)에 따르면, 2012년<sup>1)</sup> 인도 경제성장률은 5%가 될 것으로 전망됨.

- 이번 발표는 지난 해 12월 인도 정부가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7%에서 5.7~5.9%로 하향 조정한 후 2개월 만에 발표된 것으로 인도 경제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음을 반영함.
- 2012년 상반기에 5.4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인도 경제는 예상과는 달리 하반기에 더욱 악화되어 4.6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### ■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고금리 정책으로 소비와 투자는 감소했고 산업 생산 증가 역시 둔화됨.

-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인도 중앙은행은 13차례에 걸쳐 기준 금리를 인상했고 이는 소비와 투자 감소로 이어짐.
  -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지난 4년 동안 평균 8%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민간 소비 성장률은 크게 감소해 2012년 4.1%가 될 것으로 전망됨.
  - 또한, 총고정 자본형성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해 30.6%에서 29.9%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.
- 소비와 투자 감소는 제조업 성장률에 영향을 미쳐 2011년 성장률 2.7%에서 감소한 1.9%가 될 것으로 보임.
- 전체 GDP의 65%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의 경우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외하고 모든 부분에 걸쳐 성장률이 감소 추세임.
- 인도의 농업 생산은 강우량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데 2012년 몬순 기간 동안 내린 강우량은 평년보다 약 8.2% 감소한 819mm를 기록함. 이에 따라 곡물 생산 전년도에 비해 9.8%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며 농업 성장률은 2011년의 3.6%보다 낮은 1.8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1) 인도의 회계연도는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로 본문에서 말하는 2012년은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임.

표 1. 산업별 성장률 전망

(단위: %)

	2011-12	2012-13
농업	3.6	1.8
광업	-0.6	0.4
제조업	2.7	1.9
전력	6.5	4.9
건설	5.6	5.9
무역, 호텔, 운송, 통신	7.0	5.2
금융 서비스	11.7	8.6
사회 복지 서비스	6.0	6.8

자료: Advance Estimates of National Income, 2012-13, 인도 통계청 (CSO)

■ 2013년 인도 경제는 경제 개혁 정책과 기준 금리 인하 등을 통해 다소 회복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폭 완화가 주요 과제로 떠오름.

- 인도 정부의 경제 개혁 정책과 1월 29일 발표된 기준 금리 25bp 인하로 FY2013-14 인도 경제의 회복 가능성은 증가함.
  - 지난 해 9월과 10월 인도 정부가 발표한 경제 개혁 정책으로 소매업, 항공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.
  - 2012년 9월부터 2013년 1월까지 WPI(Wholesale Price Index: 도매물가지수)가 연속 하락하자 인도 중앙은행은 1월 29일 9개월 만에 기준 금리를 7.75%로 25bp 인하함. 이를 통해 소비와 투자가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.
- 그러나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가 점차 악화가 최근 인도 경제의 주요 문제임.
  - 루피화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오히려 감소하고 수입은 늘어나면서 2012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무역적자는 전년도보다 8% 확대된 1,67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.
  -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다소 회복하면서 수출이 증가 가능성은 있지만 원유 수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무역적자가 단기간에 완화될 가능성은 낮음.
  - 최근 인도 정부는 2012년 재정적자 목표치를 기존의 5.1%에서 5.3%로 상향 조정함. 지난 해 인도 정부는 재정적자 완화를 위해 연료 부분 보조금 감축을 발표했으나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책을 원상복귀 함.
  - 또한, 2014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포퓰리즘 정책 난발이 예상되면서 재정적자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보임.